

##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

2017. 11. 29.

### 관 계 기 관 합 동

#### 목 차

<b>I. 현황 및 문제점</b>	<b>1</b>
1. 장기소액연체자의 현실	1
2. 장기연체 발생 원인	3
3. 연체자 채무조정제도의 성과와 한계	4
<b>II.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</b>	<b>6</b>
1. 장기소액연체자 제기 지원방안	7
2. 향후 장기연체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	10
3.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	13
<b>III. 실행시 유의사항</b>	<b>15</b>
1.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	15
2. 민간,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	16
<b>IV. 추진 일정</b>	<b>17</b>

## I. 현황 및 문제점

### 1 장기소액연체자의 현실

① (규모)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명으로 추정

○ 국민행복기금 內 장기소액연체자 총 83만명\*('17.9월 기준)

\* '17.8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(73.1만명) 후 전체 보유채권 183만명(19.5조원) 중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.3만명, 장기소액 약정자 및 타제도 이용자 등 42.7만명

※ 국민행복기금 : '13.3월 출범한 채권매입 방식 채무조정기구  
-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원금 1억원 이하 &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일시 매입 → 원금감면(30~90%) 및 분할상환(최장 10년) 등을 통해 연체자의 재기 지원

○ 국민행복기금 外 민간 금융회사, 대부업체 및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는 약 76만명\*('16년말 기준) [추정]

\* 민간 금융회사 및 AMC 28.1만명, 대부업체 35.4만명, 금융공공기관 12.7만명

< 장기소액연체자 현황(추정) > (단위 : 만명, 조원)

구분	국민행복기금 內			국민행복기금 外			계
	미약정자	약정자 등 <sup>1)</sup>	소계	공공기관 <sup>2)</sup>	금융회사 등	대부업체	
인원	40.3	42.7	83.0	12.7	28.1	35.4	159.2
금액	1.9	1.7	3.6	0.6	0.9	1.1	6.2

1) 약정자(22.3만명/0.9조원), 타 제도[신복위·개인회생] 이용자(14.1만명/0.5조원), 사망자(6.3만명/0.3조원)  
2) 캄코, 예보, 신보, 기보, 농신보, 주금금

<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현황 >



< 장기소액연체자 구성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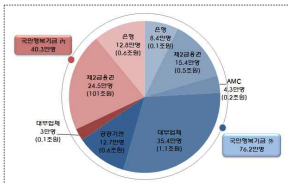
- 1 -

② (채무현황) 행복기금 (미약정)장기소액연체자의 다수는 제2금융권 채무자로, 평균 약 450만원을 약 14.7년간 연체 중인 상황

○ 행복기금 內 장기소액연체의 업권별 분포는 제2금융권 60.8%(24.5만명), 은행권 31.8%(12.8만명) 순이며, 평균 채무액은 약 450만원

○ 63.5%가 1회 이상 시효 연장된 채무로, 평균 연체기간 약 14.7년

<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업권별 구성 >



<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현황 비교 >



③ (상환능력) 대부분 사회취약계층, 저신용·저소득층으로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

○ 행복기금 內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(3.2만명), 60세 이상 고령자(8.8만명) 등 약 30%(12만명)는 사회취약계층

○ 행복기금 채무자의 약 46%는 중위소득의 40% 이하(1인가구 기준 월소득 66만원 이하)이며, 대부분 신용등급 8~10등급의 저신용자

< 실제 사례 ① >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강씨(여, 73세). 남편이 11년 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600만원이 강씨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음. 국민행복기금은 최대 90%까지 원금을 감면하여 60만원만 갚으면 채무가 없어진다고 하지만, 생계급여 49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강씨에게는 이조차도 버거운 상황.

< 실제 사례 ② > 운전기사로 일하던 이씨(남, 59세)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. 대학생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12년전 대출받은 800만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되었으나, 최대 60% 감면을 받아도 현재 소득이 전혀 없어 상황이 막막한 상황.

- 2 -

## 2 장기연체 발생 원인

### ① (민간 금융권) 채권자의 건전성 관리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부실채권의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장기연체 발생

- 금융회사가 **추심, 매각** 등의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**회수·정리** 하는 과정에서 부실채권은 **주로 대부업자 등에 집중**\*

\* 최근 3년간('13~'16.3월) 금융회사가 매각한 가계 부실채권(연간 약 3조원)은 주로 대부업자(42%), 자산관리회사(31.3%)에 매각

- 부실채권의 **재매각이 반복**\*되는 과정에서 **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, 영세 대부업자\*\*의 과도한 추심**에 노출될 가능성 증가

\* 대형 대부업자 또는 제2금융권 등의 1차 매입·회수 이후,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할인 폭이 커져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의 인수와 재매각이 용이해짐

\*\* 낮은 규제수준(자기자본 3억원)으로 매입채권추심업자 난립('17.9월 939개)

### ② (공공기관) 개인 부실채권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의 채권관리가 형식적인 유지관리에 그쳐,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곤란

- 소극적 상각\*, 관행적 시효연장 등 **형식적인 채권 유지**로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을 **장기보유**하여 채무자의 **신속한 재기 지원** 제한

\* (금융공공기관) 기관별로 상각에 3~10년 소요 vs. (은행) 연체후 1년내 상각

- 공공기관별 **상이한 관리방식**으로 인해 **효율성·형평성 저하**

\* 동일 채무자에 대해서도 기관별 상각 및 채무조정 기준·방식 등에 따라 채무 부담이 달라,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

◇ '17.3월 「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방안」을 통해 금융공공기관(주금공예보·캠코·신보·기보·농신보)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추진 중

- ①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**대손상각**하고 캠코에 매각하여 **일원화 관리**
- ② 채무조정 시효관리 등 기관별 모범사례를 공유하고, 채무조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

- 3 -

## 3 연체자 채무조정제도의 성과와 한계

### ① (신용회복위원회) 신용회복협약 가입기관 보유 채권에 한해 채권자 동의(채권금액 기준 1/2이상)가 있어야만 채무조정 가능

- (성과) 신복위는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연체자의 **채무감면,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**을 지원 중

\* '02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, '16.9월 법 제정에 따라 법정기구화

- '02년~'17.9월말까지 **총 142만명의 채무조정 지원**(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포함, 신청자 기준 159만명)

\* 개인워크아웃 : 이자 전액 감면, 상각채권은 원금의 30~60% 감면  
프리워크아웃 : 연체이자 감면, 이자율 50% 감면

- (한계) 금융회사간 협약(신용회복협약)에 기초한 시스템이므로, **협약 미가입 중소형 대부업체\* 채권** 등은 채무조정 지원 불가

\* '16년말 등록 대부업체 8,654개 중 협약 가입기관은 728개(미가입 7,926개)

### ② (법원 개인회생) 회생·파산 신청 비용, 소요 기간 등의 부담이 있으며, 법원의 미인가 결정시 채무조정 진행 불가

- 법원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다 채무자의 **채무조정**(사채 포함) 또는 **파산 면책**을 지원 중

- 신청에서 인가결정까지 수개월에서 **최대 1년 이상 소요**되고 인지대, 송달료, 법률서비스 등 **신청비용 약 2백만원 소요**

- 법원 회생·파산 절차의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복위는 **Fast-Track 절차**를 통해 채무자 지원 중('13년~)

◇ **패스트 트랙(Fast-track)** 제도 : 신복위 워크아웃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법원 회생·파산으로 연결을 지원(17.6월 전국 법원과 연계 완료)

- ① 법원 개인 회생·파산 진행 소요기간 단축(9→3개월) 및 신청서류 간소화
- ② 변호사·파산관재인 비용, 인지대·송달료 등 소요비용 지원(약 200만원)

- 4 -

③ (국민행복기금) 연체자 채무조정, 전환대출 지원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초과회수금 지급 등은 한계로 지적

- (성과) '13년 출범 이후 연체자의 채무조정 및 자활 지원, 바뀔드림론 공급 등을 통해 총 69만명의 금융생활 지원
  - '13.3월 이후 '17.9월말까지 약 61만명(6.8조원)의 연체자에 대해 원금감면(평균 감면율 54%), 장기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
  -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은행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바뀔드림론을 공급('13.4월~'17.9월, 총 9,901억원)하여, 약 8.2만명의 이자부담 경감
- (한계) 초과회수금의 금융회사 분배, 미약정자 다수 잔존,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미비 등은 한계로 지적
  - 일시적으로 매입·이관\*('13~'14년)한 채권에 한해 채무조정 가능
    - \* 신규매입 110만명(10.6조원), 공적AMC 이관 178만명(17.4조원) 등 총 288만명(28조원)
  - 당시 금융회사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하여, 상대적으로 채무자 보호에 취약한 대부업체 보유·추심 채권 매입은 저조\*
    - \* 국민행복기금 출범시 매입·이관채권(28조원) 중 대부업체 채권(약 1조원)은 3.6%
  - 사후정산 방식 매입채권\*은 채무자의 상환액이 채권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어 금융회사의 이익이 지속 증가
    - \* '13년 신규매입채권(10.6조원)의 경우, 약 80%(8.6조원)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채권 회수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
  - 상환능력·의지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연체채권을 일괄 인수·매입하여 여전히 미약정자가 다수(101만명) 존재
  - 추심중단, 소각 등 적극적 정리체도가 미흡하여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\*도 상환약정 체결을 통해서만 재기 가능
    - \* 예) 월소득 50만원 이하(중위소득의 30%)인 경우에도 상환약정 체결

- 5 -

## II.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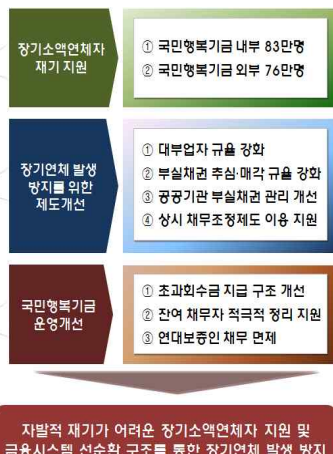
### 기본 방향

- ① 既발생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·소각(일회적·한시적 조치)을 통해 그간 누적된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
- ② 향후 장기연체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부실채권 관리·매각 시스템내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
- ③ 국민행복기금 잔여채무자 재기 지원 및 향후 발생 수익금은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근본적인 운영방식 개선

< 장기연체 발생 흐름 >



< 장기연체자 지원대책 개요 >



## 1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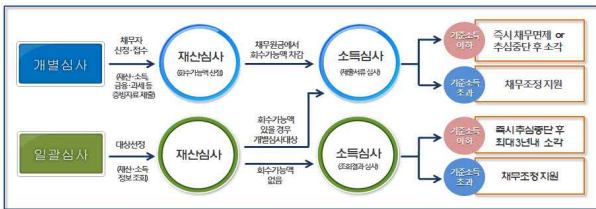
- ◆ **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적인 채무정리**

### 가. 지원 대상

#### ◇ 국민행복기금 내·외부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자

- **원금 1천만원 이하** 채무를 **10년\***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내·외부의 **장기소액연체자(약 159만명 추정)** 中
    - \* 2017년 10월 31일 기준
  - **본인이 신청하는 자\***에 대하여 **상환능력 심사**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적극적인 채무정리(18.2월~)
    - \*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없이 일괄심사
  - **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(생계형 재산\* 제외), 중위소득의 60%\*\*** (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) 이하이면, **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**
    - \* 예) 압류금지 재산, 차령 10년 이상·장애인 자동차,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
    - \*\* 법원 개인회생시 적용되는 “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” 기준
- ☞ **실제 지원 규모는 신청여부,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확정**

< 상환능력 심사 방안 >



- 7 -

### 나. 정리 방안

#### ◇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추심중단 → (유예기간 후) 채권 소각

- **국민행복기금 내** 장기소액연체자(83만명)에 대해서는 상환의지(약정 여부) 등 **채무자 특성을 감안**하여 차등적 채무감면
  - (a) **연체 중인 자**(미약정, 40.3만명) :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**일괄 재산·소득조치**를 통한 상환능력 심사 후, 상환능력 없으면 ☞ **즉시 추심중단 → 최대 3년\* 이내 채권 소각**
    - \*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장기소액연체자의 평균 잔여 시효 약 3.3년(40개월)
  - (b) **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자**(약정 등, 42.7만명) : 본인 신청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후, 상환능력 없으면 ☞ **즉시 채무면제**
- **국민행복기금 외** 장기소액연체자(약 76.2만명 추정)에 대해서는 **본인 신청시 채권 매입 또는 채무제조를 통해 신속 정리**
  - (c) **연체 중인 자**(민간 금융권 63.5만명 추정, 금융공공기관 12.7만명) : 본인 신청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후, 상환능력 없으면 ☞ **채권 매입 후 즉시 추심 중단 → 최대 3년 이내 채권 소각**
    - \* 신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·소각을 위한 별도 기구 설립(18.2월)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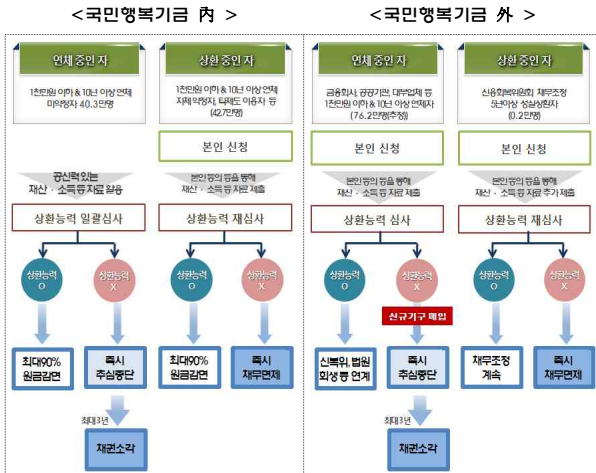
#### < 국민행복기금 외부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신규 기구 설립(안) >

- ① (형태)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/ 일시적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기구
- ② (재원) 관련 시민·사회단체 기부금, 금융권 출연금 등
- ③ (사업)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를 위해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의 채권만을 매입·소각하므로 추심·채권 회수 등을 통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

- (d) **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자**(신복위 0.2만명) : **성실상환자 등\*** 신청시 상환능력 재심사 후, 상환능력 없으면 ☞ **즉시 채무면제\*\***

\*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자 중 연체발생 10년 이상 & 채무 조정전 원금 1천만원 이하인 자가 5년 이상 또는 75%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 
 \*\* 신복위의 '협약에 따른 자율 채무조정' 시스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필요

## 1) 채무조정 프로그램



## 2) 재기지원 프로그램

◆ 지원대상자에 대해 채무감면 조치와 병행하여 **취업 및 창업**을 **알선·중개**하여 소득창출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 (※고용부, 중기부, 지자체 등 연계)

취업지원 프로그램	창업지원 프로그램
<b>행복잡이</b> (구직등록→취업상담→알선) <b>취업성공패키지</b> (상담·검사→직업훈련→알선) <b>고용촉진장려금 지급</b> (사업주에 장려금 지급) <b>드림셋 사업</b> (일자리+자산형성+신용회복 연계)	<b>창업교육 프로그램</b> (창업교육, 코칭 및 멘토링, 자금지원 등) <b>창업 정책자금 지원</b> (시설·운전자금, 예비창업자 보증 등)

## 2 장기연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

◆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化 되지 않도록 개인 부실채권의 추심·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, 채무조정제도 개선

### 가. 대부업자 규율 강화

◇ 개인 부실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

❶ (진입규제 강화) 개인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**매입채권추심업자**의 자본요건 등을 상향하여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 차단(‘18.상)

< 매입채권추심업자 진입규제 강화(안)>

구 분	현행	개선(안)	(비교) 채권추심회사
자본요건	자기자본 3억원	자기자본 10억원	자본금 30억원
인력요건	-	상시인원 5인 이상	상시인력 20인 이상

❷ (매입채권 담보대출 제한)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하여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통한 반복적인 채권 매입, 과잉 추심 등 방지

\* 대부분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재원으로 부실채권 추가 매입 → 조달금리 이상 회수 위해 과잉추심 가능성

- 저축은행, 여전사 등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\*(‘18.상)

\* 예) 전체 대출규모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 등 제한

❸ (대부업 채무조정 활성화) 신복위협약 의무 가입대상을 확대\* 하고, 미가입시 과태료 상향\*\* 등 협약 가입의무 강화(‘18년)

\* 예) 신복위 협약 가입대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(매입채권추심업자 포함) 자산기준을 현재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범위 지속 확대

\*\* 예) 현재 미가입시 과태료 1천만원 → 2천만원

❹ (특별검사) 신복위 협약 가입, 미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 채권 매입 등에 대해 금감원·지자체 합동 일제 점검 실시(‘18년)

나. 부실채권의 추심·매각 규율 강화

◇ 소멸시효 연장, 추심·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 강화

- ❶ (소멸시효 연장 개선) 업권별 자율규제 등을 통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\*('18.1월~)
- \* 소멸시효 연장시 상환능력 심사 의무화, 취약계층(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노령자 등)에 대해서는 원칙적 소멸시효 연장 제한 등
- ❷ (추심·매각 규제 실효성 제고)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 중인 추심·매각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등 추진
  - 소멸시효완성채권 매각·추심 금지\* 및 대출채권 매각의 단계별 절차 규제\*\* 법제화 우선 추진('18.상)
  - \* 「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」: '15.12월 금융권 시행, '16.11월 대부업자 적용
  - \*\* 「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」: 매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, 매입처 실사, 채권 서류정보의 충실한 제공, 매입처 사후관리 등('17.4월~)
  - 부실채권 추심·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 및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종합 검토('18년)
  - 한편, 현재 신용정보법(채권추심회사), 대부업법(매입채권추심업자) 등에 산재된 추심관련 규제의 종합 정비방안 검토('18년)
- ❸ (채무자 보호 강화) 채무자 스스로 불법·부당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, 권리구제 수단 강화('18년)

다.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개선 확대

◇ 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조정·정리 추진

- 중진공, 지신보 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의 적기 상각, 상각채권의 일원화 관리 추진
- 채권관리 직원의 면책근거 마련, 채무조정 실적 성과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

- 11 -

라.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지원 강화

◇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통한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지원

- ❶ (종합 신용상담 강화) 정책 서민금융상품 신청\*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, 종합 신용상담 및 교육이수 의무화('18.상)
- \* 일반적으로 한계해주는 채무조정보다 추가 자금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,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신용재무상담 필요
- 상담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('17년말 42개), 야간상담 신설·주말상담 단계적 확대('17.12월~) 등 추진
- ❷ (채무조정 감면을 확대) 차주의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실시한 채권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시 추가 감면을 적용\*('18.하)
- \*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없이 대출한 채권자에 불이익 조치 → 대출심사 강화 유도
- ❸ (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)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에 대해 상환기간에 따라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지원 등 확대('18.상)

<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지원 확대(안) >

	현행	개선(안)
소액대출	[09개월] 최대 300만원 [12개월] 최대 1,000만원 [36개월] 최대 1,500만원	(현행 +) [06개월] 최대 200만원
신용카드	[24개월] 50만원 한도 카드 발급 [30개월]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	(현행 +) [36개월]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

- ❹ (공적채무조정 연계 강화) 법원 개인회생·파산시 소요되는 비용(약 80~200만원)에 대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('18.상)

< 개인 회생·파산비용 지원대상 확대(안) >

	현행	개선(안)
지원대상	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(1~3등급) 70세 이상 고령자	기초수급자, 장애인(1~6등급) 60세 이상 고령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 부양자, 한부모 가정 등

### 3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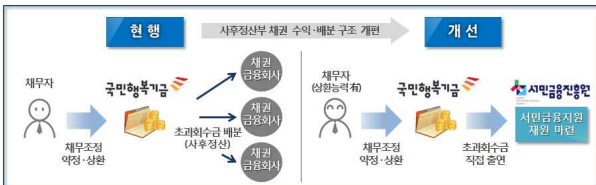
- ◆ 향후 회수금이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
기금 잔여채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리 추진

#### 가. 초과회수금 지급 구조 개편

##### ◇ 채권 회수금이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되는 구조로 개편

- 채무자 상환액이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현재  
국민행복기금의 수익 배분구조 개편 추진('17.12월)
- 보유채권 중 채무자가 정상 상환 중인 기존 약정채권 등\*을  
일괄 매각(→자산관리공사)하여 향후 초과회수금 발생·지급 중단
  - \* 약정채권 외 발견채권이 있어 회수가 가능한 채권 등 현금흐름 있는 채권 포함
- 약정채권 매각으로 금융회사가 지급받는 채권 매각대금 등은  
서민금융 재원마련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 협조 요청\*
  - \* 기부금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활용할 예정
- 향후 발생하는 회수금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 추진

< 국민행복기금 수익 배분구조 개편 >



- 13 -

#### 나. 잔여 채무자 적극적 채무정리 지원

##### ◇ 장기소액연체자 외 채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 채무감면

- 장기소액연체자 외 채무자\*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
상환능력 재심사 후, 적극적인 채무조정 실시('18.2월~)
- \* 기존 약정자, 타제도 이용자, 미약정자 등 장기소액 제외한 기타연체자 총 100만명

<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현황('17.9월말 기준) >

구 분	기존 약정자	타제도 이용자 (신복위·법원회생)	미약정자	사망자 등	계
장기소액연체 (10년이상 & 1천만원 이하)	22.3만명 (0.9조원)	14.1만명 (0.5조원)	40.3만명 (1.9조원)	6.3만명 (0.3조원)	83만명 (3.6조원)
기타 연체 (10년미만 or 1천만원 초과)	22.5만명 (3.3조원)	12.7만명 (2.3조원)	60.6만명 (9.7조원)	4.2만명 (0.6조원)	100만명 (15.9조원)
합 계	44.8만명 (4.2조원)	26.8만명 (2.8조원)	100.9만명 (11.6조원)	10.5만명 (0.9조원)	183만명 (19.5조원)

\* '17.8월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73.1만명(5.6조원) 소각(채권포기) 이후 잔여채권

-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% 원금감면율로 분할상환을 지원하고,  
일시 상환시 20% 추가 감면 실시
- 현재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(중위소득 60% 이하), 원금 90% 감면 후,  
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환유예 등 지원

<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선 >

현 행	개 선 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일반채무자 : 30~60% 원금감면/이자면제 (연체 15년 이상 &amp; 중위소득 24% 이하이면, 심사를 거쳐 90%까지 원금감면 가능)</li> <li>· 취약계층 : 70~90% 원금감면/이자면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상환능력 있는 채무자(중위소득 60% 초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위소득 이상인 자 30~60% 원금감면</li> <li>- 중위소득 이하인 자 70~90% 원금감면</li> </ul> </li> <li>·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(중위소득 60% 이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기소액연체 : 추심중단 → 3년내 소각</li> <li>- 기타 연체 : 90% 원금감면 + 상환유예</li> </ul> </li> </ul>

#### 다. 연대보증인 채무 면제

##### ◇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복기금내 소급적용

-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(23.6만명)은 별도 신청  
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면제('17.12월)

- 14 -



### Ⅲ. 실행시 유의사항

#### 1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

◆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정리방안의 소과정에 걸쳐, 도덕적 해이 최소화 장치 마련

##### 가. 장기소액연체채권 중심의 지원

◇ **자력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「취약계층」 지원에 집중**

- 소액의 연체로 인해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려온 채무자\* 지원에 집중하여,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적으로 최소화
- \* 행복기금 10년이상 1천만원 이하 연체자의 평균 채무액은 약 450만원 수준

##### 나.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

◇ **재산소득 등 「상환능력」에 따른 채무감면이 원칙**

-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활용한 보다 면밀한 재산·소득 심사\*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한하여 추심중단
- \*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현황,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, 카드 사용내역 등 상환능력 심사자료 확대

##### 다. 유예기간 설정 및 상환능력 재심사

◇ **기존 성실상환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**

- 기존 상환기록, 상환외지 등에 따라 처리시기를 차등화\*하고, (유예기간 후) 최종 처리 전 상환능력 재심사 실시
- \* ① 기존 약정자, 타제도이용자 등(42.7만명) 중 상환능력 없는 자는 즉시 면제  
② 미약정자(40.3만명) 중 상환능력 없는 자는 최대 3년내 채권소각

- 15 -

##### 라. 부정 감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

◇ **재산소득을 은닉하고 지원 받을 경우 엄중한 불이익 조치**

- 미신고 재산·소득 발견 등 「부정감면자 신고센터」를 운영하여 부정감면자 발견시, 감면 조치 무효화 및 신고자 포상
- \*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 ‘부정감면자 신고센터’를 설치하고, 온라인 홈페이지 및 통합 콜센터 ‘1397’에서도 신고 접수
-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‘금융질서문란자’로 등록하여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(→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 발생)
- \*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거래에서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(예: 대출사기, 보험사기, 신용카드 범죄, 대포통장 양수도 등)

#### 2 민간, 지자체 등과의 협업 강화

◆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의 소과정에 걸쳐, 민간 시민·사회단체,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

##### 가. 신규 매입기구 설립에 관련 시민·사회단체 참여 유도

◇ **정책결정 과정에 채무자 입장 적극 반영**

-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채권 처리를 위한 신규 기구의 의사결정(이사회 등)에 관련 시민·사회단체 등 참여기회 제공
-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·소각, 채원 조달 및 활용 등의 정책 결정에서 채무자 입장 적극 반영 가능

##### 나. 채권매입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민간·지자체 협업 강화

◇ **민간·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채무자 지원 점진 확대**

-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 접수시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외에도 지자체 복지공무원, 금융복지상담센터, 민간 상담기관 등 활용

- 16 -

#### IV. 추진일정

과제 내용	추진계획	기관·시기
㉑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		
행복기금 내부	• 연체중인 자(미약정자) 정리	• 상환능력심사→추심중단/3년내 채권소각 진흥원 캠프 1712월
	• 상환중인 자(약정자) 정리	• (신청시)상환능력심사→즉시 채무면제 진흥원 캠프 182월-
행복기금 외부	• 연체중인 자(민간공공) 정리	• 채권 매입·소각 위한 신규기구 설립 금융위 182월- 캠프 2027년 182월- 금융위 2028년
	• 성실상환자(신복위) 정리	• (신청시)상환능력심사→즉시 채무면제 신복위 182월-

㉒ 장기연체자 발생방지 제도개선		
대부업자 규율강화	• 진입규제 강화	• 매입채권추심업자 자본요건 등 상황 (대부업법 개정) 금융위 18.상
	• 매입채권 담보대출 강화	• 저축은행·여전사 등 대부업자 대출 제한 (업권 규정 개정) 금융위 18.상
	• 대부업 채무조정 활성화	• 신복위협약 가입대상 및 과태료 조정 (서민법 개정) 금융위 18년
	• 특별검사	• 금감원·지자체 일제 점검 금감원 행정부 18년
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강화	• 소멸시효 연장 개선	• 시효연장 기준 업권별 자율규제 등 (업권별 가이드라인) 금감원 181월- (금융위)
	• 규제 실효성 제고	• 시효완성채권 매각·추심 금지 법제화 (채권추심법 등 개정) 금융위 18.상
		• 매각 단계별 절차 규제 법제화 추진 (대부업법 등 개정) 금융위 18.상
		• 금융회사 등 책임성 강화방안 검토 • 추심관련 규제 일괄 정비방안 검토 금융위 18년
	• 채무자 보호 강화	• 채무정보 제공범위 확대, 권리구제 강화 금융위 신정원 18년

- 17 -

과제 내용	추진계획	기관·시기
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개선		
•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개선 확대	• 중진공·지신보 등까지 확대 (기관별 내규 개정)	금융위 중기부 18.상
상시적 채무조정 이용지원 강화	• 종합 상담·교육 의무화	금융위 18.상
	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대 설치	진흥원 신복위 캠프 지속
	• 주말상담 확대·야간상담 신설	1712월
	• 채무조정 감면을 확대	• 신복위 채무감면을 추가 적용 (협약 개정) 신복위 18.하
•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	•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지원 확대	신복위 18.상
• 공적채무조정 연계 강화	• 법원 회생·파산 소요비용 지원 등 확대	신복위 18.상

㉓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		
초과 회수금 지급구조 개선	• 초과회수금 지급중지	• 약정채권 등 캠프 일괄매각 진흥원 캠프 1712월
	• 향후 회수금 서민재원 활용	• 초과회수금 등 진흥원 출연 (MOU 체결) 캠프 진흥원 18.상
잔여 채무자 적극적 정리	• 상환능력별 채무감면	• 최대 90% 원금감면 지원 및 일시 상환시 20% 추가감면 진흥원 캠프 182월-
	• 채무감면 후 상환유예	• 상환능력 없는 경우 원금감면 후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환유예 등 지원 진흥원 캠프 182월-
연대 보증인 채무면제	• 연대보증인 채무면제	• 연대보증인의 경우 (신청없이)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면제 진흥원 캠프 1712월

- 18 -